

G-Welfare Weekly Report

01 중앙정부 정책동향

1. 한국은 54번째로 행복한 나라

01 주요 내용

- 유엔(UN)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을 맞아 공개된 '2019 세계 행복보고서' 에서 핀란드는 10점 만점에 7.769점으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조사됨
 - 핀란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에 올랐으며, 6가지 요소에서 두루 높은 점수를 기록
- 두번째로 행복한 나라는 덴마크이며 노르웨이, 아이슬란드, 네덜란드, 스위스, 스웨덴 순
 - 이밖에 뉴질랜드, 캐나다, 오스트리아가 10위권 안으로, 이들 10위권 국가들은 순서만 달라졌을 뿐 지난해 조사와 차이를 보이지 않음
- 행복지수는 1인당 국내총생산(GDP)과 사회적 지원, 기대 수명, 사회적 자유, 관용, 부정부패 정도 등 6개 요소를 측정 기준으로 측정하였으며, 조사시점은 2016~2018년
- 한국은 156개국 중 54위(5.895점)이며 지난 해 57위(5.875점)에서 3계단이 상승
 - 지표별로는, 기대 수명(9위)과 1인당 GDP(27위), 관용(40위)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반면,
 - 사회적 지원(91위)과 부정부패(100위), 사회적 자유(144위) 등에선 하위권에 머물러 전체적으로는 중위권 정도에 그치는 결과가 나옴
 - 특히 사회적 자유는 156개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,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아프가니스탄(155위), 시리아(153위) 등
 - 최근 5년간 한국의 행복 지수는 △2015년 47위 △2016년 58위 △2017년 56위 △2018년 57위 △2019년 54위 등 대체로 50위권을 맴돌고 있는 상태
- 아시아에서는 대만(6,466점, 25위)의 순위가 가장 높고, 싱가포르(34위)와 태국(52위)이 뒤를 이었고, 일본(58위)과 중국(93위)은 한국보다 낮은 순위를 차지
 - 일본은 전년 조사에서 54위로 한국에 앞섰으나 올해에는 순위가 낮아짐
- 미국은 최근 경기 호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비해 한 계단 떨어진 19위에 위치
- 보고서는 "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이 지속됨에도 행복도는 상당 수준 후퇴하는 경향을 보인다"면서 "경제적 부가 행복의 유일한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"고 지적

02 시사점

-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
 -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·경제적 요소들이 행복지수에 기여한 정도를 분석한 결과*, 한국 국민들은 사회적 여건들 중에서도 사회보장제도가나 사적인 도움 등을 포괄하는 '사회적 지원'에 만족하는 정도가 0.20으로 OECD 평균(0.36)의 절반 수준에 불과

*국회예산정책처 (2018). 국제비교로 본 한국의 삶의 질 분석. 경제동향&이슈. 66호

01 중앙정부 정책동향

2. 사회복지시설 803개소 운영평가 결과, 평균 87.6점

01 주요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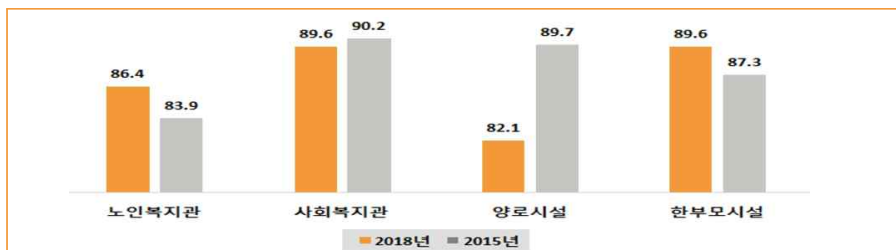
-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관, 사회복지관, 양로시설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03개소의 3년간 (2015~2017년) 운영 실적을 2018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
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라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·환경, 재정·조직운영, 인적자원 관리, 프로그램·서비스, 이용자권리, 지역사회 관계 영역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,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 수행 중
- 사회복지시설평가는 11개 유형 약 4,300개 시설을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3년 주기로 평가

〈표〉 사회복지시설 그룹별 평가주기

| 사회복지시설 | 5기('11~'13) | 6기('14~'16) | 7기('17~'19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, 노숙인생활시설, 장애인복지관 | 411개 ('11년) | 498개 ('14년) | 660개 ('17년) |
| 노인복지관, 양로시설, 사회복지관, 한부모가족복지시설 | 765개 ('12년) | 839개 ('15년) | 938개 ('18년) |
| 아동생활시설, 장애인거주시설, 장애인직업재활시설 | 1,014개 ('13년) | 1,881개 ('16년) | 2,700개 ('19년 예상) |
| 소 계 | 2,190개 | 3,218개 | 4,298개 |

- 평가항목은 6개 영역으로 구분되며 시설유형별로 43~59개 지표로 구성
 - 평가영역은 ①시설·환경, ②재정·조직, ③인적자원관리, ④프로그램·서비스, ⑤이용자·생활인의 권리, ⑥지역사회관계
 - 평가결과 상위시설 및 개선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지원되며, 평가결과 미흡시설(D, F등급)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컨설팅을 1년간 실시
- 평가 결과 4개 시설유형의 총점 평균은 87.6점으로 사회복지관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89.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
 - 양로시설은 82.1점으로 4개 유형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, 이는 신규 평가시설이 크게 늘어나 평가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미흡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

〈그림〉 연도별·시설유형별 총점 평균현황



- 평가등급별로는 평가대상 803개 시설 중 A등급은 583개소 (72.6%), F등급은 61개소(7.6%)
 - A등급 비율은 사회복지관 85.3% > 노인복지관 69.5% >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9.3% > 양로시설 52.9%의 순
 - F등급 비율은 양로시설 14.4% > 노인복지관 8.9% > 사회복지관 7.1% > 한부모가족복지시설 0%의 순

**A등급(90점 이상), B등급(80~90점 미만), C등급(70~80점 미만), D등급(60~70점 미만), F등급(60점 미만)

- 평가영역별로 보면, 모든 시설유형의 영역별 총점평균이 80점 이상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표준화된 것으로 보이나, ‘이용자 권리’ 영역에서는 시설유형별 점수 차이가 12.6점으로 다소 크게 나타나 이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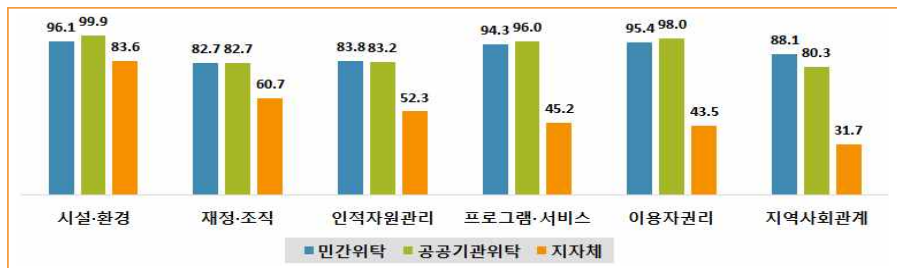
〈표〉 시설 유형별 · 영역별 평가점수

| 구 분 | 시설수 | 총점 평균 | 영역별 평가점수 | | | | | |
|-------|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| | | 시설· 환경 | 재정· 조직 | 인적자원 관리 | 프로그램· 서비스 | 이용자 권리 | 지역사회관계 |
| 전체 | 803 | 87.6 | 95.3 | 81.1 | 81.6 | 90.9 | 91.8 | 84.0 |
| 노인복지관 | 246 | 86.4 | 96.8 | 85.4 | 79.4 | 89.6 | 90.2 | 80.1 |
| 사회복지관 | 340 | 89.6 | 96.0 | 78.5 | 83.3 | 93.4 | 93.9 | 87.3 |
| 양로시설 | 104 | 82.1 | 92.0 | 76.6 | 75.3 | 86.9 | 83.7 | 78.9 |
| 한부모시설 | 113 | 89.6 | 92.8 | 83.7 | 87.0 | 89.8 | 96.3 | 87.4 |

단위 : 개소, 점

- 운영주체별로 보면,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설공단(이하 공공기관) 위탁시설(16개소)은 평균 90.7점, 민간위탁시설(731개소)은 평균 90.6점
 - 운영평가 결과 수준이 유사하나,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(56개소)은 평균 48.5점으로 시설운영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
 -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의 평가가 낮은 주된 이유는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연속성이 낮고, 시설 고유기능인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자원개발 업무보다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장 대여 등 단순 시설관리에 치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

〈그림〉 운영주체별 / 평가영역별 평가점수



* 단위: 점

- 특히,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 중 34개소는 2회(2015년, 2018년) 연속 ‘F등급’ 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에 대한 운영개선방안 마련이 시급
- 보건복지부는 미흡한 평가시설(D~F등급)에 대해서 ‘시설운영 개선계획’ 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, ‘품질관리단’을 통한 컨설팅으로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개선을 추진
 - 2회 이상 연속해서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한 시설(F등급)은 명단을 공개하고, 시설유형별 운영 기준 및 필수 기능 수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설명칭 사용제한, 운영주체 변경권고 등의 조치
 - 사회복지서비스원 설립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 중 평가결과가 연속으로 미흡한 시설은 사회복지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

02 경기도 시사점

- 경기도는 전국 최초 ‘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’를 공포하는 등 지자체 주도 평가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시설 평가의 지방이양을 준비
 - 지자체 평가이양이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평가계획을 수립, 지표개발, 현장평가단구성·운영, 사후관리, 인센티브 제공까지 진행하는 것
- 재단은 ‘17년도에 11개 사회복지시설 유형별로 맞춤형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으며, 올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평가를 실시할 예정
 - ‘19년에는 장애인복지관의 시범평가를 통해 ‘20년 경기도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

02 사도/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

1. 경기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

보건복지부가 발표한 '2018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' 를 바탕으로 경기도 소재 시설의 평가결과를 살펴봄

- 2018년 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평가 대상 기관은 총 138개소
 - 노인복지관 52개소, 사회복지관 62개소, 노인양로시설 14개소,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개소
- 시설평가 결과, A등급을 받은 시설의 비율은 85.5%로, 138개소 중 118개소에 해당
 - 노인복지관은 A등급 비율이 92.3%(총 52개소 중 48개소)로 '15년 85.1%(총 47개소 중 40개소) 대비 7.2% 증가
 - 사회복지관은 A등급 비율이 91.9%(총 62개소 중 57개소)로 '15년 93.1%(총 58개소 중 54개소) 대비 1.2% 감소
 - 노인양로시설은 A등급 비율이 64.3%(총 14개소 중 9개소)로 '15년 63.6%(총 11개소 중 7개소) 대비 0.7% 증가
 -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A등급 비율이 40%(총 10개소 중 4개소)로 '15년 30.0%(총 10개소 중 3개소) 대비 10% 증가

*자료 : 보건복지부
보도자료, 2019.
3.30.일자

〈표〉 등급별 시설현황

| 시설유형 | 시설수 | | 평가등급별 시설수(비율, %)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| | | A등급 | | B등급 | | C등급 | | D등급 | | F등급 | |
| | 경기도 | 전국 | 경기도 | 전국 | 경기도 | 전국 | 경기도 | 전국 | 경기도 | 전국 | 경기도 | 전국 |
| 합계 | 138 | 803 | 118 (85.5) | 583 (72.6) | 13 (9.4) | 117 (14.6) | 3 (2.2) | 27 (3.4) | 1 (0.7) | 15 (1.9) | 3 (2.2) | 61 (7.6) |
| 노인복지관 | 52 | 246 | 48 (92.3) | 171 (69.5) | 3 (5.8) | 38 (15.4) | - | 8 (3.3) | - | 7 (2.8) | 1 (1.9) | 22 (8.9) |
| 사회복지관 | 62 | 340 | 57 (91.9) | 290 (85.3) | 2 (3.2) | 20 (5.9) | 1 (1.6) | 5 (1.5) | - | 1 (0.3) | 2 (3.2) | 24 (7.1) |
| 양로시설 | 14 | 104 | 9 (64.3) | 55 (52.9) | 2 (14.3) | 23 (22.1) | 2 (14.3) | 5 (4.8) | 1 (7.1) | 6 (5.8) | - | 15 (14.4) |
|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| 10 | 113 | 4 (40.0) | 67 (59.3) | 6 (60.0) | 36 (31.9) | - | 9 (8.0) | - | 1 (0.9) | - | 0 (0.0) |

* (A)90점이상, (B)80점이상~90점미만, (C)70점이상~80점미만, (D)60점이상~70점미만, (F)60점미만

- 재단은 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사회복지관 1개소, 양로시설 2개소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사후관리컨설팅을 실시하여 맞춤형 컨설팅 및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
 - * 미흡한 평가시설(D~F등급) 8개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'품질관리단' 을 통한 컨설팅이 이루어짐

2. 재단 주요사업 안내

| 사업명 | 주요내용 |
|-----------------|--|
| 경기도-산동성 발전포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시/장소 : 2019. 3.29.(금), 10:00~12:30/경기연구원 7층 대회의실 • 참석 대상 : 30명 내외(재단, 경기연구원, 중국 산동사회과학원 관계자 등) • 내 용 : 경기도 및 산동성의 인구고령화 현황을 분석, 각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대응정책 소개 • 문 의 : 정책연구실 경영전략팀(☎267-9399) |

03 FACT CHECK

의료급여 대상자, 건보 가입자보다 외래진료 2배 더 많다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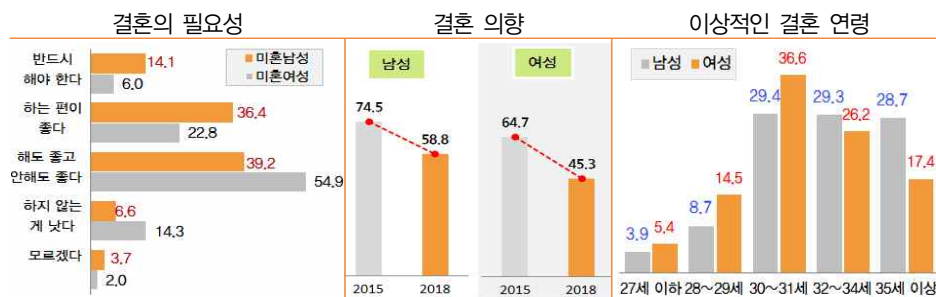
- 한국보건사회연구원*에 따르면, 의료급여 대상자가 건보 가입자보다 연간 외래방문이 2배 더 많고, 의료급여 수급자 상위 1% 연간 외래방문이 216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
 -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국가유공자, 의사상자 등이 대상으로,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20~30% 수준인 반면, 의료급여(1종)는 1~2% 수준
 - 의료급여 수급자의 1인당 연간 외래방문 횟수는 34.03회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1인당 연간 외래방문 횟수인 14.6회의 2.33배 수준
-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병원을 찾지 않아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는 과소 이용자들도 상당하다는 연구 결과*도 존재
 - 관련 연구는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 중 약 4%(6만여명)는 의료이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며, 과소 의료이용자의 가구 특성은 노인이나 장애인을 비롯하여 독거가구가 대부분
 - 의료 과소이용자의 발생 원인은 '장애인의 낮은 병원 접근성', '병원/ 의사의 차별적인 태도나 분위기', '비 도심지역 등의 거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' 등 이 주요한 것으로 조사
- 건강 불평등의 문제는 소득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통설로, 소득 상위 20% 계층은 하위 20% 계층보다 기대수명이 높으며, 건강은 소득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 요건
- 의료급여 대상자의 높은 의료 이용은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기 때문으로,
 - 낮은 본인부담률로 인한 과잉진료를 우려하기 보다는 의료 과소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

*관련보도 : 메디컬투데이, 3.21일자 기사

**관련보고서
1) 한국보건사회연구원(2018), 의료급여 외래 의료이용 적정화 방안 연구.
2) 서울보라매병원(2018),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이용 분석 및 건강관리 지원방안 연구.

04 통계로 보는 복지

'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·복지 실태조사' 결과



*단위 : %

자료: 한국보건사회연구원(2018), '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·복지 실태조사' 보고서

- 미혼 남성은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50.5%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
 - 미혼 여성은 '반드시 해야 한다' 6.0%, '하는 편이 좋다' 22.8%로 28.8%만이 긍정적
- '결혼할 생각이 있다'고 답한 비율은 남성이 58.8%인 반면 여성은 45.3%
 - 2015년의 조사와 비교할 때, 결혼에 긍정적인 사람의 비율은 남녀 각각 15.7%, 19.4%씩 감소
- 남성이 생각하는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은 30-31세가 29.4%, 32-34세가 29.3%
 - 여성은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이 30-31세라고 36.6%가 응답